

IDP 정책연구 2014-01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 ‘제3의 길’

이 진 복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요약

-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벤치마킹한 제3차 수정주의, 성찰적 진보
-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
 - 제1차 수정주의
 - ▶ 19세기말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의 진화적 사회주의
 - 제2차 수정주의
 - ▶ 1950년대 독일 사회민주당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
 - ▶ 맑스주의를 폐기하면서 윤리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 정당 선언
 - ▶ 자유주의를 신념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를 정면 비판하고, 경쟁과 자유시장과 성장을 진보의 수단으로 찬양했으며,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임을 공식화
-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 클린턴의 신민주당은 제3의 길을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진보주의로 규정하고 기회, 책임, 공동체를 제3의 길의 가치로 명시
 - 미국 민주당은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도를 장악할 것을 강조
 - 중도는 공동열망의 정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지향
 - 중도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모두의 성공을 위한 전반적 계층상승 전략을 추진하는 성장과 기회의 정당이 되는 것
- 제3차 수정주의: 제3의 길
 - 제3의 길은 영구 수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타파하는 혁신 중도를 자임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수정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름
 -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질투의 정치를 폐기하면서 재능과 포부, 열망과 성취를 통한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혁신 중도를 통해 자연스런 집권당 지향
 -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은 좌우파의 교조를 버리고 사회정의와 함께 역동성과 창의성, 혁신을 옹호함으로써 유럽 차원에서 제3의 길을 승인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파리선언은 기업가정신을 연대의 새로운 차원으로 선언함으로써 성공과 온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3의 길의 정신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승인
 - 진보 거버넌스 회의의 베를린 선언은 기회,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전세계 진보의 가치로 다시 확인함으로써 제3의 길을 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립
- ‘존재감의 정치’를 넘어 ‘공감의 정치’를 실행하는 진보의 성찰이 절실
 - 적대적 상호의존의 정치에서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에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로
 - 증오와 과거의 정치에서 민생과 미래의 정치로

목차

1. 서: 성찰적 진보	1
2.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	5
3.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8
4. 영구 수정주의	16
(1)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16
(2)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파리선언, 베를린선언	23
5. 결: 공감의 정치	30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

이진복(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서: 성찰적 진보

1979년 영국에서 대처(Margaret Thatcher)의 집권, '80년 미국에서 레이건(Ronald Reagan)의 압승을 시작으로 신우파(New Right)의 득세는 ‘정치재편성’을 이끌었다. 좌파는 ‘보수적’ 구좌파로 전락하고, 우파는 ‘개혁적’ 신우파로 변모를 일신했다. 좌파와 진보의 오랜 등식이 마침내 깨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좌파의 아노미로 나타났다. 좌파의 고정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신우파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와 ‘두 국민 정치(two nation politics)’의 모순적인 포퓰리즘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다.

‘법과 질서’, ‘가족의 가치’, 안보 등을 설파하는 신우파의 신보수주의는 좌파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동자들과 서민이 우파를 지지하는 패러독스를 유발했다. 구좌파는 안정감을 희구했던 노동자들과 서민의 열망을 이해하기는커녕 경멸했다. '68세대의 저항정신과 히피의 반(反)문화운동에 물들어있던 좌파에게 이는 충격이었고, 몽매한 ‘꼴통’ 탓을 하며 더욱 더 대중에게 낯선 말을 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등을 주장하는 신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우파가 ‘개혁의 정당’이 되고 좌파가 보수화되는 이율배반을 이끌었다. 구좌파는 물가를 잡고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활인의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몰두했다. 돈만 밝히는 여피의 욕망을 탓하며, 여전히 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라는 사회정책을 수요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주문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신우파는 성공하고 싶은 보통사람의 소박한 정서를 대변하고 무능

한 좌파정당 집권 시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두 국민 정치¹⁾를 최신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치밀하게 집행했다. 유능과 무능으로 국민을 나누는 신우파의 두 국민 정치는 선악 이분법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구좌파의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세상물정을 아는’ 냉혹하지만 유능한 신우파에게 선의는 있지만 무능한 구좌파는 연전 연패할 뿐이었다.

구좌파는 카오스에 빠져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도그마를 고수하면서 원리주의자가 되었다. 정치적 환멸에 빠져 정치권에서 인퇴, ‘폴뿌리 운동’으로 귀향가거나 정치적 환상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멘토가 되어 집권을 신념의 오염으로 가르쳤다. 더욱이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연이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종언’, 즉 ‘진보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진보정당은 집권 가망이 없는 ‘운동권 정당’, ‘불임 정당’으로 최종선고를 받은 듯 보였다. 그러나 캄캄하기만 한 절망 속에서 정치적, 이념적 대반전이 일어났다. 그 중심에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려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이 있다.

1992년 미국에서 12년간의 신우파 공화당 정부로부터 클린턴(Bill

1) 제습은 신우파를 '두 국민 정치'의 전형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국민 정치를 정의한다. Bob Jessop, et al.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 Polity*(1988).

첫째, 두 국민 정치의 개념적 정의로서 두 국민 정치는 생산자와 기생층이 대립하는 사회의 위로부터 아래로 확장되는 단일한, 수직적 균열에 기초한 사회분리의 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두 국민간의 대립은 내재적으로 적대적이고 케인주의적 전후 합의의 집단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여기서 생산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시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로 구성되고 기생층은 무능력한 배제된 자들로 구성된다. 물론 생산자/기생층의 대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분법, 가령 개인적 자유/국가적 강압, 동/서, 부자/빈민의 이분법도 동원된다.

둘째, 지원의 정치(politics of support)에서 보면 두 국민 정치는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그들의 기여 때문에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고 기생층은 시장에 적당한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작은 국가’로,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셋째, 권력의 정치(politics of power)에서 보면 두 국민 정치는 재상품화와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맥락에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더 큰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저항에 대한 억압과 공권력 투입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는 ‘강한 국가’로 신보수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두 국민 정치는 미국에서 흑/백 이분법의 ‘썬기 정치(wedge politics)’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남부의 백인 민주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생산자/기생층의 대립구도로 백인과 흑인을 대립시키는 남부 전략을 추진했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남부 백인 민주당원을 ‘레이건 민주당원(Reagan Democrat)’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오늘날 남부가 공화당의 아성으로 전변될 수 있었다. Stanley B Greenberg, et al. *The New Majority*. Yale University Press(1997).

Clinton)의 신민주당(New Democrat)으로의 정권교체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New Labour)의 압승은 제3의 길로의 전환을 전세계적으로 가속화시켰다. 유럽의 주요 4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중도진보정당이 동시 집권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중도진보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배경 하에서 1998년 뉴스위크는 사람이 아닌 제3의 길이라는 운동을 올해의 유럽인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은 전세계적인 ‘제3의 민주화 물결’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흥민주국가에서 제3의 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특히 1997년 최초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는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제3의 길은 단순한 서구적 현상이 아닌 ‘글로벌 제3의 길’인 것이다²⁾.

‘제3의 길’의 현대화된 중도진보정당의 전세계적인 승리를 배경으로 ‘진보 거버넌스 회의(Progressive Governance Conference)’가 형성되었다. 1999년 9월, 워싱턴에서 민주당리더십협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가 주최하는 ‘제3의 길: 21세기를 위한 진보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고, 같은 해 11월, 피렌체에서 최초의 진보 거버넌스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진보 거버넌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상설적인 싱크탱크로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설립했다. “진보적 지도자들은 진보정치가 낡은 태도와 관행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진보적 사상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까지 매년 진보 거버넌스 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스톡홀름 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초청받아 전문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 참여정부에서도 정동영, 이해찬이 대표로 참석했다³⁾.

2) Anthony Giddens(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2001).

3) Nathaniel Copsey. "Policy Network and Progressive Governance: The First Five Years: The Changing Political Arena". *Progressive Politics*(vol 5.1, 2006).

물론 ‘제3의 길’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제3의 길’이었다. 전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미국 시장자본주의와 소련 공산주의 사이의 제3의 길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1951년 재결성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자신을 제3의 길로 칭했다. 자연스럽게 각국의 중도진보정당은 자신이 처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진보의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가령, 미국과 영국은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주의(new progressivism)’를 사용하면서 각각 ‘신민주당’, ‘신노동당’으로 자칭하고, 독일은 ‘신중도(Die Neue Mitte)’, 프랑스는 ‘다원적 좌파(Plural Left)’, 네덜란드는 ‘보라색 연합(Purple Coalition)’의 이름으로 혁신을 추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제3의 길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로 알려졌다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찰적 진보’, 진보에 대한 근본적 자기혁신이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 총선에 연속 패배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절한 자기성찰이 절실하다. 더욱이 여당 대비 처참한 지지율은 민주당의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요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3의 길에 대한 연구는 민주당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역사에서 제3차 수정주의, 성찰적 진보이다. 아직도 낡은 진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모범으로 삼는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주제로 잡아 사회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성찰의 전통을 갖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제3의 길을 ‘재탕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로 냉소하는 철지난 진보론자에 대항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와 기념비적 공식 문서에 근거해 제3의 길이 필승의 선거 전략일 뿐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에 근거한 성찰적 진보임을 밝힐 것이다.

2장은 제3의 길의 기원,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다루고 있다.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에서 시작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의 바트고데스베르크(Bad Godesberg Programme) 강령으로 이어진 사회민주

4) Bill Clinton. et al. “Turning Ideas into Action.” The New Democrat (May/June, 1999).

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소개하고 있다. 3장은 오늘날 제3의 길의 원조이자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제3의 길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다루고 있다. 4장은 제3의 길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유럽과 세계적 차원에서 제3의 길을 승인한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Tony Blair & Gerhard Schroeder Manifesto), 사회주의 인터내셔널(the Socialist International)의 파리선언(Declaration of Paris), 진보 거버넌스 회의의 베를린선언(Berlin Communiqu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성찰적 진보를 위한 ‘공감의 정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2.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

사회민주주의는 자기혁신의 강력한 수정주의 전통을 내장하고 있는 성찰적 진보이다. 제3의 길은 19세기말 베른슈타인의 ‘진화적 사회주의(Evolutionary Socialism)’까지 소급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수정주의의 명시적 창안자인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 즉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계층이 합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선전선동의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개혁은 타협을 통한 일보 전진이며, 타협은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토대이다. 타협이 없는 사회는 우적(友敵)간의 처참한 생사투쟁을 거쳐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사회민주당의 실천가, 즉 노조지도자의 지지를 얻었지만 곧 제2인터내셔널에서 배격되었고, 이후 양차대전과 대공황의 극단의 시대는 수정주의를 봉인시켰다⁵⁾.

1950년대 재개된 ‘제2차 수정주의’는 1959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사회민주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이데올로기 수준의 경직된

5) Donald Sassoon,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New Press(1996), pp. 5-26.

교조와 실천상의 마지못한 실용주의 간의 이중성을 종식시킴으로써 그릇된 이념과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했다. 2차 수정주의는 사회주의의 가치를 윤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실용적 수단을 중시하는 ‘윤리적 실용주의(ethical pragmatism)’에 기초했다. 맑스주의를 폐기하면서 자유, 정의,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로 천명하고, “유럽의 민주사회주의는 기독교 윤리, 인도주의, 고전철학에 뿌리내려져 있다”고 선언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수정주의적 특징은 첫째,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사상의 자유 정당이다. 사회민주당은 상이한 신념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주의는 궁극적 진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 종교적 진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나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양심의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어 공산주의를 자유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비판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유의 근본적 억압자이고 인권과 개인과 국민의 자결에 대한 위반자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전통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한다.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 전통에 호소할 권리가 없다.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적 아이디어를 왜곡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는 공산당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갈등을 이용한다.”

둘째, 자유의 개념을 경제로 확장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즉 국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맑스주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사회정의의 확립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회에 의해 보호된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중심적 문제는 소유권이 아니라 경제력”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의 국가 집중을 포함한 모든 집중은 위험하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기본 조건”으로 “소비재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 작업장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경쟁만이 아니라 창

의성을 발휘할 고용주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경제의 전체주의적 통제는 자유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은 자유경쟁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시장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지배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강령은 이를 “가능한 만큼 경쟁, 필요한 만큼 계획”의 명제로 정리한다. 경쟁과 자유시장이 진보의 수단으로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이 중시되었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목적”에서 첫 번째 목적으로 “번영의 항구적인 성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생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분배”와 “품위를 잃은 종속과 착취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열거한다.

셋째, 노동계층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민정당(Volkspartei, a people's party)이 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사회민주당은 노동계층의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이 되었다.” 새로운 유권자, 특히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의 출현이 사회민주당 강령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중산층을 포용하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은 선거승리의 필수적 전제조건일 뿐 아니라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한다. 사회민주당의 탈노동계층화는 이후 수정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되었다⁶⁾.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수정주의(neo-revisionism)⁷⁾’라 불리는 제3의 길은 ‘제3차 수정주의’에 해당된다. 3차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의 특징은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미국 민주당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3의 길은 미국 민주당이 ‘새로운 진보주의’로써 최초로 기술”했고 “부분적으로 신민주당(New Democrat)으로부터 빌려오고 부분적으로 자신의 정치 진화의 노선을 따르면서” 유럽에서 제

6) "Godesberg Program of the SPD" in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Vol 8, Occupation and the Emergence of Two States. Donald Sassoon, (1996), pp. 241-273. 진보의 역사를 혁명적 맑스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단계 구분한다면 “고테스베르크 강령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버렸다.” 사회주의를 ‘전후 사회민주주의’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Anthony Painter, "After Social Democracy?" Policy Network(2012. 5. 24).

7) Donald Sassoon, (1996), pp. 730-754.

3의 길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이 “영국에서 독일, 네덜란드까지 모든 곳에서 세계경제에 인간의 얼굴을 갖게 하려는 투쟁에서 선진 세계 전체의 중도진보정당을 부흥”시켰고,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민주당리더십협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에서 시작되었다”고 자부한다. “제3의 길의 뿌리는 신민주당운동(new democrat movement)에 굳게 박혀있고, 진정으로 민주당리더십협회는 제3의 길의 원조임을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미국화’가 운위되었다⁸⁾. 사회민주주의의 3차 수정주의, 제3의 길은 미국 민주당에서 최초로 기안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천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1990년대 유럽 사회민주당의 연속 집권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3.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미국 민주당은 1980년대 중반이후 ‘제3의 길’을 추구하면서 “미국 정치의 진보적 전통의 현대화론자”로서 ‘신민주당’을 자칭했다. “우리는 민주당을 언제나 이끌었던 전통적 가치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 가치를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이 변화하는 시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의 ‘현대화’는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신민주당 정책은 진부한 좌우논쟁을 초월하고, 진보적 아이디어, 주류 가치(mainstream values),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혁신적 해법에 근거한 통치의 제3의 길을 정의한다⁹⁾.”

클린턴의 대선승리를 이끌었던 1992년 신민주당 대선 공약은 처음

8)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Polity, 2000), pp. 2-3. Seymour M. Lipset, "The Americanization of the European Left" *Journal of Democracy*(2001. 12). pp.14-87. Caroline Daniel. "Democrats Spend Week Giving Direction to 'Third Way' Ideology" *The Washington Post*(9/27, 1998).

9) "About the New Democratic Movement" (1998. 6. 1).

http://www.dlc.org/ndol_ci.cfm?kaid=85&subid=109&contentid=894

으로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개하는 ‘제3의 길(a third way)’을 명문화했다¹⁰⁾. 1992년 신민주당 대선 공약은 기존 민주당의 협소한 이익집단들에 영합하는 백화점식 공약남발이 아니라 기회, 책임, 공동체의 가치 중심 공약으로 미국 민주당과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문건이다. 다섯 가지 측면에서 신민주당 대선 공약은 이전 4반세기의 민주당 공약과 근본적으로 달랐다¹¹⁾.

첫째, 신민주당 공약의 중심은 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다.

둘째, 정책은 미국의 주류가치, 즉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신앙, 관용, 가족, 근로에 근거했다.

셋째, 새로운 호혜의 정신을 강조했다. 활동적 정부를 공약하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넷째, 정치적 양극단으로부터 나타난 신고립주의를 거부했고 민주당이 세계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는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더 분권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책임있게 만들고, 공공서비스에서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중앙정부의 견고한 관료제와 협소한 압력단체로부터 보통사람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부를 혁신할 것을 공약했다.

제3의 길 철학을 가장 명백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것은 1996년 발간된 〈새로운 진보선언: 정보화시대의 정치철학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이다. 큰 정부를 주장하는 ‘뉴딜 좌파주의(New Deal liberalism)’를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낡은 진보주의’로, 이에 대비하여 제3의 길을 21

10) 1992년 미국 민주당 공약의 ‘기회’의 장에서 “우리는 지난 12년간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do-nothing government)와 번영을 위해 세금과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큰 정부 이론, 모두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제3의 길을 제시한다.” ‘책임’의 장에서 “우리는 냉담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화당의 태만이나 만능처방으로서의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낡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공한다. 우리는 정부를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 편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하여 낡은 접근들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지지한다.”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www.presidency.ucsby.edu/ws/index.php?pid=29610#axzz1xqTrkgQQ>

11) Al From, "Waking the Dems", Blueprint(2006. 2. 9).

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진보적 가치를 적용하는 ‘새로운 진보주의’로 규정, 진보의 자기성찰을 단행한다.

새천년을 앞두고 발표된 〈선언〉은 당시 시대상황을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거대하게 집중했던 20세기 산업질서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원심력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진단한다. 구좌파처럼 “우리는 이 힘을 되돌릴 수 없다.” 신우파처럼 “이 혁명적 변화가 분출하는 불안정과 반동적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제3의 길은 “이 변동을 관리하여 모두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 좌파들이 아직도 지지하는 더 크고 더 강한 중앙정부가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우리 문제의 근원이고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보수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료적 현상태에 대한 좌파의 반복적인 옹호를 대체하고 정부를 단순히 해체하려는 우파의 파괴적인 시도에 맞설 수 있는 제3의 선택(a third choice)이 필요하다.” “새로운 진보주의자는 하향식 가부장주의의 낡은 정치(the old politics of top-down paternalism)를 개인과 시민의 능력개발의 새로운 정치(the new politics of individual and civic empowerment)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새로운 진보주의의 투쟁대상을 좌파와 우파를 포괄하는 낡은 권력구조로 규정한다. “새로운 진보주의자는 통제정부로부터 능력개발정부로의 이행이 투쟁 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낡은 권력구조는 스스로를 해체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 낡은 질서의 고착된 옹호자들, 좌우 이데올로그, 로비스트, 기술관료, 자칭 빈민과 노인의 호민관에서 특혜추구기업까지 수많은 이익집단들과 싸워야 한다¹²⁾.”

12)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 Progressive Foundation(1996. 6). pp.1-5, 22-25.

제3의 길의 “새로운 진보철학은 미국 민주주의의 진보적 전통에 뿌리 내린 세 가지 이상에 근거한다.”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호혜적 책임(mutual responsibility), 자치(self-government)가 그것이다¹³⁾. 이는 기회, 책임, 공동체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이후 전 세계 주요 중도진보정당에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로 승인되었다.

미국 민주당 현대화론자들은 소소한 이슈에 홀려 끊임없는 이전투구로 정치혐오를 유발하거나 정치적 방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가치’를 강조했다. 기회, 책임, 공동체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젠더에 수미일관 적용되고 모든 어젠더를 종합하는 제3의 길의 가치이다. 가령, 경제이슈에서 기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투자, 책임은 재정건전성과 이해당사자의 규칙준수, 공동체는 공동번영의 가치이다. 또한 그때그때의 절충주의적 기회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구좌파와 신우파와 다른, 민주당의 명확한 정통성을 설정한다. 가령, 미국에서 포로노 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보호가 대립하는 이슈에서 구좌파는 전면적인 표현의 자유를, 신우파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규제를 주장했다. 제3의 길은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보급,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동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배포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보장했던 것이다.

(표1) 기회: 새로운 정치적 목적

	구좌파	제3의 길	신우파
가치	평등한 결과	평등한 기회	특권
경제	분배	모두를 위한 성장	소수만 성장
성장론		분수경제	낙수경제
정부의 역할	보호	능력개발	방임

‘기회’는 “새로운 정치적 목적”으로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13) Progressive Foundation(1996. 6). pp. 6-11.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이다. “이는 개인이 공정하고 열린 규칙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회의 이상이다.” 신우파의 ‘특권’과 좌파의 ‘평등한 결과’가 아닌 ‘평등한 기회’를 강조함으로써 신우파와 좌파와 다른 제3의 길의 ‘정의’의 가치이다. 기회는 소수의 특권을 변호하는 신우파의 ‘낙수경제론(trickle-down economics)’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분수경제론(bubble-up economics)’의 근거가 되며, 좌파의 분배논리가 아닌 성장을 우선시하는 가치이다. 또한 기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우파의 방임과 좌파의 보호를 넘어 중도의 ‘능력개발자(enabler)’ 역할을 뒷받침하는 가치이다.

(표2) 책임: 새로운 사회적 윤리

	좌파	제3의 길	신우파
가치	일방적 권리	호혜적 책임	일방적 의무
정책방향	정부의 비효율	정부의 효율성과 기업의 책임성 동시 강화	기업의 책임성 방기

‘책임’은 “새로운 사회적 윤리”로서 “호혜적 책임의 새로운 계약”이다. “도덕은 중요하다. 우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로부터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책임 없이 권리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우파의 일방적, 전통적 의무와 좌파의 일방적 권리가 아닌 ‘호혜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신우파와 좌파와 다른 ‘시민권’의 가치이다. 제3의 길의 책임은 신우파의 원리주의적이고 하층에게만 강요하는 의무가 아닌 대화를 통해 재구성되고 특권에 반대한다. 또한 좌파의 비효율적 정부 확대와 자유지상주의적 풍조를 고취하는 일방적 권리가 아닌 권리와 동반하는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여 기업의 책임경영과 정부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표3) 공동체: 공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수단

	구좌파	제3의 길	신우파
가치	국가의 보호	공동체의 자활	개인의 자유
정책방향	큰 정부	민관파트너십	시장방임
계층관	부자적대	전반적 계층상승	서민경시

‘공동체’는 “공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자치의 새로운 원칙, 즉 자활을 위해 시민의 능력을 개발하는 공공제도”이다. 공동체는 신우파의 시장만능과 구좌파의 큰 정부가 아닌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균형잡힌 사회를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이다. 국가만이 ‘공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장과 함께하는, 성과를 중시하는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주장한다. 또한 신우파의 서민경시와 구좌파의 부자적대가 아닌 중도의 공동체는 빈곤층과 어린이 등 취약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만드는 전반적 상향이동의 가치이다.

〈선언〉은 새로운 진보의 가치로부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다섯 가지 핵심 도전에 대응할 통치전략을 도출한다¹⁴⁾.

첫 번째 통치전략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을 복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을 강화하고 범죄를 퇴치하고 도시빈민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특수이익집단에 도전하고 권력을 시민과 지방정부에 돌려줌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미국의 놀라운 다양성으로부터 힘과 통합을 얻기 위해 공통의 시민적 이상과 관용의 정신을 옹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경제·정치적 자유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구적 혼란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 세기 전 산업화시대가 도래할 때, 뉴딜의 진보주의처럼 제3의 길

14) Progressive Foundation(1996. 6). pp. 11-22.

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진보주의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진보운동’이다. “한 세기 전의 진보주의자처럼 우리는 단순히 조직된 이익집단의 충돌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려 한다. 이들과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장악하는 어젠더를 기안하려한다. 이들과처럼 우리는 새로운 당파적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공통의 토대를 구축하려한다. 단순히 한 정당을 쇄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드림을 혁신하려한다.”

21세기에 민주당이 새로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현실과 조화된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저소득층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거나 시민운동 활동가와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은 고정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차후 2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세력들의 가치와 열망을 대변해야 한다. 이 세력들은 정부를 포함한 거대 제도들에 회의적인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s)와 X 세대(GenX'ers), 육체노동이 아니라 정신노동을 하는 인터넷 접속 노동자(wired workers), 점차 고소득층 유권자를 구성하는 새로운 학습계층(new Learning Class)의 고학력자, 주류로 동화되면서 미국사회의 면모를 변화시키고 있는 라틴계와 아시아계 이민자이다.” 민주당리더십협회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중도 전략을 제시한다¹⁵⁾.

정치의 기본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중도를 장악해 공화당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중도는 통치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쟁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무당파와 온건파는 반복적인 당쟁보다 실용적 문제해결의 정치를 지지한다. 정당의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국민이 규정하는 실질적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민주당은 성공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 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부질없는 좌우논쟁은 국론을 분열시켰다.

15) Al From & Will Marshall, "Building the Next Democratic Majority" Blueprint(1998. 9. 1). Al From & Bruce Reed, "What We Stand for" Blueprint(2005. 3. 16).

너무나 오랫동안 진보주의자는 시민사회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를 간과하면서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 또한 공공 영역이다. 중도는 하향식 관료제를 능력개발 정부(enabling government)로 개혁한다.

중도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체성 집단 정치(identity group politics)를 넘어 국민 정체성 정치(national identity politics)를 통해 국민통합을 지향한다.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익집단들에 호소하여 민주당을 낭비적인 정부와 동일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교차하여 공동의 가치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개단체 없이 직접 유권자에게 말해야 한다. 오늘날 계속 늘어나는 고학력 유권자들은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민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 이질적 이해집단에 대한 협소한 호소는 정치적 연합을 단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킨다.

중도는 신경제, 즉 지식기반경제를 포용하고 주도한다.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공포와 비관주의를 부채질해서는 안 되고, 모두를 위너스서클(winners' circle)에 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낙관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성장과 기회의 정당(the party of growth and opportunity)’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성장’과 ‘기회’의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민주당의 필승 메시지였다. “가장 강할 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이었다.” 이는 계급투쟁의 정치를 모두의 성공을 위한 ‘공동 열망의 정치(the politics of common aspiration)’로 대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승자가 계속 번영하고, 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전반적 계층 상승전략(general upward mobility strategy)’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성공을 돕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이 필요하다.

4. 영구 수정주의

(1)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독일 사회민주당의 기본가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제3의 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노동당의 시장 지향적 접근, 네덜란드의 시장과 합의 지향적 접근, 스웨덴의 과거와의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는 개혁적 복지국가의 길, 프랑스의 발전의 연속성이 분명한 국가주도적 길이 그것이다¹⁶⁾. 즉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이러한 차이를 “출발점은 다르지만 다양한 진보정당들과 정부들이 기여하고 있는 단일한 제3의 길 사고의 광범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한다¹⁷⁾. 그리고 ‘단일한 제3의 길 사고의 광범한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제3의 길》의 부제처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임을 강조한다. “제3의 길은 단순한 실용주의의 일종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사회경제적 변동의 세계에서 실현하려는 전면적인 정책 혁신”, 즉 수정주의라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정확히 사회민주주의의 혁신과 관련된 중도진보 정치 철학이다¹⁸⁾.”

동일한 맥락에서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수정주의 전통의 현대적 사회민주주의(a modernised social democracy)로 규정한다. “제3의 길은 사회정의와 중도진보의 목적에 열정적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현대적 사회민주주의이

16) 김호균.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 백의(2001), pp. 52-56. 또 다른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 전략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현대화 국가주의(the modernising statism)이다.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선택의 중심성과 시장을 형성하는 정치의 능력을 강조한다. 둘째, 영국의 세계화 사회민주주의(the globalized social democracy)이다. 세계화와 시장의 경쟁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가능성을 강조한다. 셋째, 독일의 합의적 조합주의(the consensual corporatism)이다. 프랑스 모델과 영국 모델의 중간으로 사회적 파트너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조정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Olaf Cramme & Patrick Diamond(eds), *After the Third Way: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I. B. Taurus(2012), pp. 8-9.

17) Giddens(2000), p. 31.

18) Anthony Giddens, "Revisiting the Third Way" Policy Network(2010. 6. 28).

다.” “제3의 길의 결정적 차원은 정책이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 역이 아니다.” 그런데 “가치가 실천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용주의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레어는 사회민주주의의 2차 수정주의, 고테스베르크 강령의 ‘윤리적 실용주의’를 계승, 다시 정식화하고 있다.

제3의 길의 수정주의는 과거의 수정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회민주주의의 3차 수정주의로서 제3의 길은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벤치마킹했을 뿐 아니라 ‘영구 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를 원칙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수정주의와 대비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접근방식은 ‘영구 수정주의’다. 즉 선진산업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분명한 견해에 근거해 우리의 목적에 부응하는 더 나은 수단에 대한 계속적 추구이다¹⁹⁾.

제3의 길의 영구 수정주의는 좌우의 그릇된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혁신 중도(radical centre)를 자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수정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radical’을 ‘급진’이 아니라 ‘혁신’으로 역한 이유는 ‘radical’이 “과거의 전통적 좌파주의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들(fresh ideas)에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⁰⁾. 블레어가 자연스런 집권당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 혁신주의(long term radicalism)’를 지향한다고 선언했을 때, ‘장기적 혁신주의’는 ‘영구 수정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블레어는 이런 맥락에서 좌우의 극단적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혁신론자(a radical)임을 자임한다.

나는 혁신론자이다. 나는 중도가 혁신적 정치의 비옥한 지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좌파와 우파의 극단론자는 실질적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성공적인 현대적 정당은... 주류의 다수에게 말하면서 중도에 있어야 한다²¹⁾.

19) Tony Blair. *The Third Way: New Politics for the New Century*, Fabian Society(1998), p. 4.

20) Antony Giddens(ed), *The Progressive Manifesto*, Polity(2003), p. 6.

21) Colin Brown, "Blair: We're Centre Party Now", *The Independent*(1996. 4. 12).

블레어는 혁신 중도가 모순적인 도전에 대응해 새로운 해법을 추구하는 영구 수정주의의 토대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증진하는 한편, 경쟁의 도전에 답할 수 있는 현대정치의 새로운 혁신 중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든스는 제3의 길의 제1강령으로 ‘혁신 중도’를 제시한다. 좌파와 혁신을 동일시하는 낡은 등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구좌파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상태를 방어하는 보수주의가 되었고, 오히려 신우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혁신주의였고 따라서 그 시대를 지배했다²²⁾. “우리는 중도의 혁신주의(a radicalism of the centre)가 필요하다. 혁신을 좌파 또는 우파와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다²³⁾.”

정치가 서로 대립하는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을 전제하고, 좌파와 우파가 이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제3의 길이 넘어서고자 하는 좌우의 그릇된 고정관념은 구좌파와 신우파이다. 제3의 길은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생을 넘어서는 혁신 중도인 것이다. “국가통제, 높은 세금, 생산자의 이익에 집착하는 구좌파와 공적 투자, ‘사회’라는 개념, 집합적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악마로 간주하는 신우파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이다²⁴⁾.” 제3의 길은 구식의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함으로써 신우파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고 이 틀을 일상생활의 이슈에서 지구적 이슈까지 전분야에 걸쳐 적용하려는 영구 수정주의인 것이다.

블레어는 나아가 진보 내의 논쟁이 불만족스런 두 입장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면서 “제3의 길은 진보 안에서의 제3의 길”임을 주장한다. 원리주의적 진보는 정책처방을 이데올로기로 경직화하여 국유화와 국가통제라는 수단을 목적으로 전도시켰다. 다른 한편 온건 진보는 이

22) Ant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Polity(1998), p. 70. Anthony Giddens, *Beyond Left and Right*. Polity(1994).

23) Anthony Giddens, "We Need a Radicalism of the Centre" The Green Political Foundation(2010. 5. 3). <http://www.boell.de/ecology/society/ecology-society-anthony-giddens-radicalism-of-the-centre-9114.html>

24) Anthony Giddens(2010. 6. 28).

그릇된 목적을 받아들이면서 단지 속도만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혁신주의(radicalism)는 국유화와 지출의 양으로 판단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수정주의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3의 길은 단지 속도를 늦추는 온건 진보가 아니라 영구 수정주의에 기초해 상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용하는 혁신 중도이다. 영구 수정주의는 자유주의의 근본적 속성이고 따라서 진보 안에서의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블레어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중도진보 사상의 거대한 두 흐름”으로 규정하고,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분열이 서방세계 전체에서 진보정치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한다. “제3의 길은 중도진보 사상의 거대한 두 흐름, 즉 민주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합함으로써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통해 “국가를 목적 또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반드시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블레어는 평등한 가치(Equal Worth), 모두를 위한 기회, 책임, 공동체를 제3의 가치로 규정하고,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유주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우리의 사명은 모두의 자유와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본질적인 네 가지 가치, 즉 평등한 가치, 모두를 위한 기회, 책임, 공동체를 촉진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제3의 길의 기회, 책임, 공동체와 함께 사회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평등한 가치’를 덧붙인다.

여기서 ‘평등한 가치’는 ‘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배경, 능력, 신념, 인종과 무관한 재능과 노력의 장려’이다. 제3의 길의 가치로부터 사회민주주의의 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냉소주의와 숙명론, 편견과 사회적 배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를 “재능과 포부, 열망과 성취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재능과 포부, 열망과 성취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제 재능과 포부, 열망

25) Tony Blair(1998), pp. 1-4.

과 성취를 통한 ‘중산층의 꿈’은 사회민주주의의 꿈이 되었고, 사회민주주의자는 좌파가 아니라 혁신 중도를 자임하게 되었다.

블레어는 이 재해석된 가치와 변화된 현실²⁶⁾에 근거해 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비판한다²⁷⁾.

첫째, 우리는 공동소유라는 하나의 경제적 처방을 신성시하여 이 수단이 기여해야 하는 목적을 잊을 정도로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

둘째,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전위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vanguard)에 사로잡혀 당의 구조와 조직이 황폐해졌다.

셋째, 사회행동의 아이디어가 중앙정부의 관념에 의해 지배되었다.

넷째,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그릇된 고정관념은 노동조합주의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노동계층 정당으로 창당됨으로써 노동당이 자유주의와 단절했기 때문이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노동주의(Labourism)와 개인주의와 관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분열함으로써 노동당은 개인의 책임, 자조,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잊어버리고 주변화시키면서 국가주의적 교조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당은 민심을 추종하느니 차라리 원칙을 지켜 선거에 지겠다는 ‘영광스런 패배의 신화(the myth of glorious defeat)’를 신봉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노동주의와 자유주의의 분열은 미국 민주당 또는 노르딕 국가들의 사회민주정당과 같은 하나의 통일된 진보적 중도정당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했고, 보수당 지지세력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수당 지배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블레어는 노동당이 그릇된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압력단체가 아니라 자연스런 집권당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26) 블레어는 지구적 시장과 지구적 문화의 성장, 고용과 새로운 산업의 핵심동력으로 기술발전과 숙련과 정보의 향상, 여성의 역할 변화, 정치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제3의 길이 필요한 변화된 현실로 규정한다. Tony Blair(1998), p. 5.

27) Tony Blair. *New Britain: My Vision of a Young Country*, Westview Press(1996), p. 55.

나는 압력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나는 항의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노동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다. 원칙 없는 권력은 공허하고 권력 없는 원칙은 맹목이다. 노동당은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나는 노동당을 집권당으로 지도할 것이다²⁸⁾.

자연스런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꿈’을 신념으로 말하는 혁신 중도에 기초한 가장 광범한 연합, 신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새로운 진보연합(new progressive coalition)’을 구축해야 한다. 급감하고 있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층의 지지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보수당에 반대하지만 여전히 노동당을 신뢰하지 않는 중도 유권자,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중산층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수당이 설정한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중도를 장악하면서 보수당을 주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구도(new dividing line)’를 설정해야 한다. 블레어는 “우리가 이 나라의 광범한 다수 국민이 아니라 서민만을 옹호해야 했을 때, 우리는 보수당의 게임을 하는 셈이다”고 자성한다. “보수당이 시장, 기업, 성공한 사업, 낮은 물가, 낮은 이자율, 신중한 지출의 정당으로 포즈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구도가 보수당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보수당의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보수당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한 것이다. 정치구도를 더 좋고 더 정확한 곳에서 설정해야 한다²⁹⁾.”

블레어는 제3의 길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신우파의 성장, 자유방임과 구좌파의 분배, 반(反)시장 구도를 넘어 “개인의 능력개발과 기회에 근거한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는 제3의 길의 제1정책목표이다. “여기서 정부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개발하고, 시장의 힘은 공익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시민사회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일방적 책임을 강

28) Tony Blair(1996), p. 54.

29) Philip Gould,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the Modernisers Saved the Labour Party*, Little, Brown And Company(1998), p. 237.

조하는 신우파와 공동체를 정부로 대체하면서 무조건적 권리를 주장하는 구좌파의 독단을 넘어 제3의 길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중시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정책목표로 한다. “여기서 정부는 강력한 공동체의 파트너이다.” 마지막으로 신우파의 정부해체와 구좌파의 정부확대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제3의 길은 “파트너십과 분권에 근거한 현대적 정부”를 주장한다. “여기서 현대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가 심화된다³⁰⁾.”

블레어는 노동당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공동소유라는 그릇된 수단을 노동당의 가치로 격상시킨,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된 당헌 4조를 개정했다.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 연대만이 아니라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당헌 4조를 전당원의 토론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던 것이다. 교조화된 당헌 4조를 수정함으로써 “우리는 국민에게 말하는 것과 정당 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 간의 불일치가 없어졌다. 이는 분명하고 단순하고 솔직한 정치이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이다³¹⁾.”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었던 1997년 신노동당 총선 공약은 좌우파를 넘어서는 ‘혁신 정부(radical government)’를 신노동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³²⁾. “혁신주의는 좌우파의 교조가 아니라 성과로 측정될 것이다. 신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이상의 정당이다.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것이다. 목표는 혁신적이다. 그 수단은 현대적이다.” 이 공약은 정의 공약(commitment to justice)과 기업 공약(commitment to enterprise)을 병행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당헌 4조와 함께 “질투의

30) Tony Blair(1998), p. 7.

31) Tony Blair(1996), p. 51.

32) Labour Party, "Labour Party 1997 Manifesto,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1997), <http://www.labour-party.org.uk/manifestos/1997/1997-labour-manifesto.shtml>

영국 노동당은 같은 해 총선 공약의 정신에 입각, 혁명적인 ‘노동당의 기업선언’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신노동당 정부가 할 것은 기업이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잘 경영되는 기존 기업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우리의 목표는 영국이 국제경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국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 비전과 리더십으로,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영국은 성공할 것이다.” The Labour Party(1997), "Labour's Business Manifesto: Equipping Britain for the Future", Andrew Chadwick and Richard Heffernan(eds), *The New Labour Reader*(Cambridge: Polity, 2003).

정치(politics of envy)”를 폐기했다. “우리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생활기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포부와 온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사회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2)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파리선언, 베를린선언

제3의 길과 함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패러다임 전환(a paradigm shift)이 일어났다³³⁾. 이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에게 상식이 되었다. 영구 수정주의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이다.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를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로 받아들이는 영구 수정주의가 되었다. 자유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목적일 뿐 아니라 수단이 되었다. 이와 함께 부의 생산은 분배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일관된 전략은 필수적이 되었다.

영구 수정주의에 근거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은 1999년 6월 발표된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유럽의 제3의 길 Tony Blair & Gerhard Schroeder Manifesto: Europe ‘The Third Way’〉에서 명료하게 정식화되었다³⁴⁾. 〈공동선언〉은 “현대화에 자극”을 줌으로써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선언의 목적으로 천명한다.

〈공동선언〉은 사회민주정당들이 영구 수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집권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혁신하고 프로그램을 현대화함으로써 새롭게 받아들여졌다.”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 선입관 없이 이슈

33) Patrick Diamond, "Permanent Reformism: The Social Democratic Challenge of the Future?" in Peter Mandelson(ed), *Where now for European Social Democracy*, Policy Network(2004). p. 32.

34) "Tony Blair & Gerhard Schroeder Manifesto: Europe ‘The Third Way’"(1999).

에 접근하고, 매우 잘 조직되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찾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영구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유럽의 제3의 길은 “우리의 낡은 노선과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자기비판한다.

첫째, 사회정의의 축진이 때때로 평등한 소득과 혼동되었다. 그 결과 보상과 책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고 사회민주주의가 창의성, 다양성, 수월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과 평준화와 연계되었다.

둘째,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수단은 공공지출과 동일시되었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사회민주주의의 결정적 관심사항이지만 사회적 양심은 공공지출의 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사회는 이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지에 의해 진정으로 평가된다.

셋째, 국가가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나 자주 정부의 범위와 관료제의 과도한 확장을 가져왔다. 개인과 집단의 균형이 왜곡되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 기업가정신,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정신과 같은 시민의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자주 보편적 사회보호에 종속되었다.

넷째, 오랫동안 권리가 책임 위에 있었다. 그러나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국가로 이전될 수 없다. 호혜적 책임의 관념이 망각된다면 공동체정신이 쇠퇴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고 범죄가 증가하고 법체계가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성장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조절하는 일국 정부의 능력이 과장되었다. 부의 창출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다. 시장의 약점을 과장하고 그 장점을 경시했다.

영구 수정주의의 핵심은 “좌파와 우파의 교조에 의해 대변되는 세계관”을 버리고, “사회정의만이 아니라 역동성과 창의성, 혁신을 옹호”하는 것이다. 즉, “시장사회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열망의 정치’를 요구한다. “신중도와 제3의 길 정치는 급격

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에 대처하는 사람들, 승자와 패자 모두의 관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선언〉은 “고용의 증대와 일자리 기회의 확대가 사회통합의 최선의 보장”임을 선언하면서 신우파와 구좌파의 그릇된 노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2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자유방임은 끝났다. 그러나 1970년대식의 적자지출과 고압적인 국가개입이 부활되어서도 안 된다.”

제3의 길의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개인과 기업을 미래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진취적 사고방식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정부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국가는 노잡이가 아니라 조타수이다. 즉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변화된 현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입각해 〈공동선언〉은 ‘새로운 공급측면 어젠더(new supply-side agenda)’를 제시한다.

첫째,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의 틀이다. 시장의 경쟁과 무역개방은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장의 힘이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틀은 경제적 성공에 필수적이고 성공적인 고용정책의 사전 조건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과 동일시되었다.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올바른 상황에서 조세개혁과 감세가 더 큰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수요측면 정책과 공급측면 정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는 성장의 목표와 고실업의 극복이 성공적인 수요관리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공급측면 정책이 중심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책 목표는 미시경제적 유연성과 거시

경제적 안정성의 결함을 위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정책간의 명백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넷째, 적응성과 유연성은 미래 지식기반서비스경제(knowledge-based service economy)에서 중요하다.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의 잠재력을 억제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더 높은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는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더 유연해져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 정부(active government)는 경제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유연한 시장은 새롭게 정의된 적극적 정부와 결합되어야 한다. 최우선순위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투자이다.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평생 접근과 이용은 현대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여섯째,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중소기업을 옹호해야 한다. 번영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현대적 사회민주주의의 최고의 관심사항이다. 중소기업은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곱째, 건전한 공공재정은 사회민주주의의 긍지여야 한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는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차입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와 너무 자주 연관되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공급측면 정책의 관점에서 정부차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동선언〉은 일자리를 찾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는 복지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별도로 언급한다.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수급권의 안전망(safety net)이 자조가 실현되는 도약대(springboard)로 변형되기를 원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의 명령은 단순히 현금을 주는 분배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사회적 포용과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정책수단은 생활기회를 향상시키고 자조를 고무하고 개인의 책임을 장려해야 한다. 이 생활기회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은 사회민주주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동선언〉에서 정식화된 제3의 길의 영구 수정주의는 같은 해 11월, 전세계 139개국 1천여 명의 사회민주당 대표단이 참석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파리선언: 세계화의 도전 Declaration of Paris: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에서 다시 확인되었다³⁵⁾.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고 유럽으로 확대된 제3의 길의 영구 수정주의가 전세계 진보정당들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개혁적이고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종교나 불변의 관념처럼 수단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혼동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제한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에 반대한다.” 영구 수정주의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경향은 “자유에 근거한 정의를 향한 희망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결정적 차이이다. “이 믿음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관념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에 맞서도록 했다.”

〈파리선언〉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핵심 이슈를 “사회·경제·환경·인간적 측면에서 정보화사회 또는 더 넓게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의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모델의 창출가능성”으로 규정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주의의 해체된 개인주의(disintegrated individualism)”에 반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보편적 인권의 존중, 양성 평등, 개인적, 집단적 자유에 근거한 더 많은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적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연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어 ‘연대’를 “사회민주주의를 단결시키는 가치”로 규정한다.

그런데 〈파리선언〉에서 놀라운 것은 ‘기업가정신(a spirit of enterprise)’을 “연대의 새로운 차원”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35) The Socialist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Paris: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1999).
<http://www.socialistinternational.org/5Congress/XXISICONGRESS/DeclParis-e.html>

가정신의 재분배는 사회를 부정하는 금전적 개인주의(mercenary individualism)에 정반대되는 연대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니셔티브의 재분배, 개인의 창의성의 고무, 위험을 감당할 의지를 제안한다. 이것이 부의 창출과 타자를 위한 기회라는 사회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문화적 문제에서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것은 개인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보상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달함으로써 교육과 직업훈련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연대의 새로운 차원이다³⁶⁾.” 기업가정신을 연대의 새로운 차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제3의 길의 핵심 테마인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선순환, 상향 이동의 열망과 온정의 병행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이스라엘 등 전세계 14개국 중도진보 지도자들이 참석한 2000년 진보 거버넌스 회의에서 채택된 〈베를린 선언: 21세기의 진보 거버넌스 Berlin Communiqué: Progressive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는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모두로부터의 책임(responsibility from all), 모두의 공동체(community of all)”의 제3의 길의 가치를 세계 진보 거버넌스 운동(Progressive Governance movement)의 핵심가치로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선언했다³⁷⁾. “우리는 낡은 (좌우)적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를 되찾기 위한 책임을 겸허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

36) 동일한 맥락에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의 기안자인 만델슨(Peter Mandelson)은 기업가정신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가(entrepreneur)는 ‘무엇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 ‘entreprendre’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어원상 이는 창업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언제나 행위의 선택을 함의하고 영어에서는 ‘착수하다’로 번역된다. 요점은 기업가정신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행위를 선택하는 정신은 궁극적으로 경제에서 기업을 강화한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은 첫째, 규모보다 정교화, 속도, 혁신을 의미한다. 둘째, 부자가 되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큰 유연성, 독립성, 자기통제의 열망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 관료제에 의해 제공되는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개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국가경쟁력만이 아니다. 기업가정신은 사회이동의 추진력이고,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활력이고, 궁지와 자기결단의 근원이며, 근로생활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Peter Mandelson, "Government's Role in Building an Enterprise Economy"(2009).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bis.gov.uk/governments-role-in-building-an-enterprise-economy-2>

37) Progressive Governance Conference, "Berlin Communiqué: Progressive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2000) In Gerhard Schroeder(ed). *Progressive Governance for the XXI Century: Contributions to the Berlin Conference*. Kluwer Law International(2002).

한 길은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는 것이다.” 〈베를린선언〉은 구좌파의 평등한 결과와 신우파의 자유방임을 넘어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창한다. “새로운 세기에서 진보 거버넌스의 핵심 임무는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서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구도를 넘어 책임의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우리의 목적은 모두의 재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공의 권위와 민간의 개인 간의,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비정부기구와 공공부문 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베를린선언〉은 번영의 증진, 시민사회의 강화, 국제협력의 향상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제3의 길의 어젠더를 승인하고 있다. “교육은 평등, 발전, 시민권 모두에 동시에 중요하고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교육은 고용의 필수요건이고, 사회복지 시스템은 일자리 정책에 기초해야 한다. “사회정책의 토대는 효율적인 고용정책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번영, 고용, 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번영하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 비용을 줄이고, 연구와 과학적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역동적 시장은 강한 시민사회와 짝이 되어야 한다. 이는 편견이 아니라 합의된 규칙, 개혁적 정부에 기반한 것이다.”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강한 공동체의 기반으로서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정부의 능력개발의 역할(enabling role)을 지지한다.” 이는 정부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이 공익에 기여할 때,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분권화가 시민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때,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기술이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합리화하고 더 편리하게 할 때,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의 선순환은 균형적인 세계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국가 내에

서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부와 기회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적 분업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베를린선언〉은 제3의 길의 가치에 기초한 ‘성찰적 진보’의 어젠더를 세계적 차원에서 승인하고 있다.

5. 결: 공감의 정치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계승한 성찰적 진보이다. 19세기 말 베른슈타인의 진화적 사회주의로부터 시작된 1차 수정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수용, 타협을 통한 ‘평화적 개혁’을 결단했다. 1959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구현된 2차 수정주의는 맑스주의를 폐기하면서 윤리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 정당을 선언했다. ‘실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진보의 오점이 아니라 자량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를 신념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를 정면 비판하고, 경쟁과 자유시장과 성장을 진보의 수단으로 찬양했으며,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임을 공식화했다.

제3의 길은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벤치마킹한 성찰적 진보이다. 클린턴의 신민주당은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존의 정치를 타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제3의 길을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진보로 규정하고, 기회, 책임, 공동체의 가치에 근거해 민주당을 ‘성장과 기회의 정당’으로 현대화했다. ‘기회’는 신우파의 특권과 구좌파의 평등한 결과가 아닌 평등한 기회로써 모두를 위한 성장을 강조한다. ‘책임’은 신우파의 일방적 의무와 구좌파의 일방적 권리가 아닌 호혜적 책임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과 함께 정부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공동체’는 신우파의 서민경시와 구좌파의 부자적대를 청산하고 취약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만드는 전반적 상향이동의 가치이다.

제3의 길을 전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영구 수정주의’ 즉, 영구적 자기성찰을 원칙으로 선언했다. 제3의 길의 영구 수정주의는 더 이상 좌파가 진보가 될 수 없으며, 진보는 중도여야 한다는 ‘혁신 중도’를 자임했다. 질투의 정치를 폐기하면서 재능과 포부, 열망과 성취를 통한 중산층의 꿈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임을 주창했다. 1999년, 제3의 길을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승인한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은 좌파와 우파의 교조에 의해 대변되는 세계관을 버리고 사회정의만이 아니라 역동성과 창의성, 혁신을 옹호하면서 시장경제를 지지했다. 같은 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파리선언〉은 기업가정신을 연대의 새로운 차원으로 선언함으로써 제3의 길의 핵심 테마인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선순환, 성공과 온정의 병행을 승인했다. 2000년 진보 거버넌스 회의의 〈베를린 선언〉은 기회,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전세계 진보의 가치로 다시 확인함으로써 제3의 길을 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립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진보는 아직도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기업가 정신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혁신의 전제조건인 역동성과 창의성을 안전의 반대말로 여긴다. 지극히 상식적인 중산층의 꿈을 ‘욕망’으로 경멸하고, 중도는 진보의 배신 또는 마지못한 전술쯤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경쟁, 자유시장, 성장을 폄하하고, 실용을 전향으로 보는 낡은 관념은 우리나라 진보의 정신연령을 유럽 시간대에서 2차대전 이전으로 역행시키고 있다. 아니 타협을 투향으로 보는 정치적 미성숙은 우리나라 진보의 수준을 19세기로 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미성숙성은 차별성과 선명성에 집착하는 ‘존재감의 정치’에 기인한다.

존재감의 정치는 ‘강한 야당’과 ‘대안정당’간의 불가피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정치협오 수준까지 이른 불신의 시대에 문제는 야성이 아니라 신뢰이다. 야성은 야당으로써 필요하지만 수권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야당의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 오직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안정당이 될 때,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

강한 야당은 항의의 정당이 아니라 수권능력을 길러 신뢰를 받는 대안 정당이다.

존재감의 정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하는데 사용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의한 4.19 민주이념”의 헌법정신을 구현한 대한민국 정통정당일 뿐 아니라 IMF환란을 최단 시일 내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구축한 정보화의 정당, ‘제2의 산업화’를 이끈 유능한 정당이다.

이제 존재감의 정치를 넘어 ‘공감의 정치’를 실행하는 진보의 성찰이 절실하다. 첫째, 적대적 상호의존의 정치를 넘어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기초한 정치양극화의 격돌의 정치가 아니라 대내적 햇볕정책, 화해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둘째,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폭언의 정치, 축소지향의 정치가 아니라 여론조사로 말하는 보통사람의 꿈을 대변하면서 성과로 말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셋째, 증오와 과거의 정치를 넘어 민생과 미래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상대 정당을 증오하면서 실수를 바라는 반사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의 정치, 믿을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공감의 정치는 ‘김대중 정신’을 복원하여 시대에 적중하는 새로운 해법을 창안, 국민의 신뢰를 얻는 새 정치이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결합하는 실사구시적 태도,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는 포용의 리더십, 극단주의를 혐오하면서 중용의 철학을 다짐했던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은 여전히 민주당의 DNA에 아로새겨있다.

나는 분명히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나는 중도개혁주의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중도개혁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³⁸⁾.

38) 김대중 인터뷰. 경향신문(2008년 7월 30일)